

노골적 선거공작 도덕성 치명타...당 존폐 기로

이유미씨, 이준서 최고 배후 지목...지도부 인지 여부 쟁점 리베이트 흥역 겪은 당 진화 안간힘...정계개편 광풍될 수도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이러다 당 문 닫는 것 아닌가.”

국민의당 지도부가 지난 대선에서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조작을 시인하자 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대선 패배 이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재기를 모색했던 국민의당으로선 이번 사건으로 정치적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태를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의 정치적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핵심 사안을 조명해본다.

◇지도부 개입 여부=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나 지도부가 인지했느냐다. 일단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나 지도부 핵심들은 이번 일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아들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지도부와의 논의도 없이 공명선거추진단이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지도부가 몰랐다고 해도 검증 미비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이유미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도 27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 전 최고위원이 당시 안 후보에게 이번 사안을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대선 캠프가 후보와 당으로 양분되어 움직였다는 점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유미씨도 안 후보와 상당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당 적극 대응=국민의당은 지

도부는 연일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등 파문 진화에 나서고 있다. 자체적인 진상 조사단을 꾸려 의혹의 진상을 낱알이 밝혀졌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검찰, 나아가 특검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총선 리베이트 사건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흥역을 겪었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당 측에서는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다. 지도부 인사들이 의혹 조작에 나설 정도로 정치적으로 미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8월 전대를 통해 재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악재가 터지면서 허탈하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혁신위는 법적인 책임을 넘어 정치적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태일 혁신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당원 빼고 모든 것을 바꾸는 총체적 시스템 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계개편론 부상=증거 조작 논란은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당에선 일부 의원들의 탈당론과 민주당과의 통합론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중진과 초선, 안철수계와 호남계 등으로 갈린 당 내부의 불신 구조도 상당하다. 당장 파문 수습책으로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이 제안한 ‘특검’ 도입을 둘러싸고도 당 혁신위가 반발하는 등 내용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앞서 눈가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조작 논란으로 당의 가장 큰 자산으로 평가받던 안철수 전 대표도 위기에 빠졌다.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태를 헤쳐가지 못한다면 탈당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혁신을 화두로 당의 결집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사태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씨 혼자 가짜녹음에 폰 3개로 카톡까지 조작”

이준주 의원이 밝힌 '제보 조작' 전말

국민의당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준주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이 알고 있는 이번 사태의 전말을 털어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에 구속된 이유미 씨는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서 혼자 핸드폰 3대를 동원해 카카오톡 대화창을 조작하고, 문준용 씨의 파슨스 동료 이메일을 도용하고, 남동생을 시켜 가짜 녹음파일을 제작해 허위제보 내용을 만들어냈다.

이 의원은 이씨가 “취업 특혜 의혹 논란을 내가 나서서 정리하겠다”면서 자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이유미, 아들·회사 폰으로 카톡 조작→문씨 동료 이메일도 도용”=이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유미 씨는 문준용 씨의 동료인 김 모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증거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화면과 통화 녹음파일을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넸다. 하지만 이는 이씨가 조작한 허위자료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김 씨는 실재하는 사람이며, 이 씨와 친분이 있는 사람인 것은 맞다”며 “이후 기자들이 김 씨와 연락하고 싶다고 할 때, 당에서 ‘이메일로 인터뷰

“문씨 동료 이메일도 도용 당에서 누구도 내용 몰라”

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이 이메일 주소 역시 이 씨에게 물어봐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메일 주소는 실제로 김씨가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당시 기자들이 보낸 이메일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고, 당시 이 씨는 “사건이 커져 김씨가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아니냐”고 설명했지만 결국 이는 이 씨가 김 씨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도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씨가 혼자 자기 핸드폰, 회사 핸드폰, 아들 핸드폰을 가져다 놓고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씨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녹음파일도 조작했고,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하니 처음에는 지인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남동생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당에서는 몰랐다...이유미, 죽고 싶다고 하더라”=이 의원은 특히 이씨가 지난 주말 이를 털어놓기 전에는 당에서

아무도 이 내용을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씨가 검찰 통보를 받고 깜짝 놀라서 21일에 ‘드릴 말씀이 있다’고 문자를 보냈다. 주말인 24일 우리 사무실로 이씨가 왔다”며 “고소·고발이 취해질 수 있는지를 묻더라”고 떠올렸다.

이를 듣고 이 의원은 “그 말이 사실이면 당에서 보호해줄 사안이 아니며,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당에서 관리(케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이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이 전 최고위원도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결국, 이 의원과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이 씨를 다시 불러 상황을 파악했고, 이 씨의 조작 사건으로 결론났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국민의당이 나 때문에 망하겠다. 죽고 싶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이 씨의 자살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집에 확인전화도 했다.

이후 이 사건을 박주선 비대위원장에 게 보고했고, 26일 정오에 비대위원장이 공식 사과회견을 하기로 결론이 났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과 당 지도부는 이씨가 실토하기 전까지 일절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이 의원은 거듭 강조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나도 몰랐고 안철수도 몰랐을 것...특검서 규명해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27일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 “특검을 해서 당의 잘못이었다면 철저히 규명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람이 있거나 가담했다면 정확히 처벌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CP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에서 수사를 해도 (결과가) 나올 수 없지만, 일련의 사태를 국민이 불신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표는 “당원에 의해 제보가 조작됐다면 그것도 잘못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비리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돼야 하기 때문에 특검에서 국민적인 의혹을 규

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2~3일 전 당직자로부터 이런 일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검찰 수사에서 숨김없이 밝히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대선 당시 당 대표로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이런 조작이 나타났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됐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이 대선 투표일 나올 전인 5월5일 조작된 녹음파일과 메시지 캡처 화면을 토대로 폭로한 문준용 씨 취업비리 의혹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질문에 박 전 대표는 “전혀 보고받은 사실

이 없고 내용도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보고를 상사에서 숨김없이 밝히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 전 대표가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한테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면 후보에게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대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며 “안 후보가 이유미·이준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모른다. 검찰과 특검에서 철저히 규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일보 65주년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빈병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병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병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병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용량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제품(신규)에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된 제품(신규)에 적용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2)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라이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중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주 등

면적 150% 확대 색상 변경

[인상 전] → [인상 후]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